

LTE 원가자료 이달 말 공개... '기본료 폐지' 재점화

2G·3G 이어 LTE까지 포함
이통사 "영업비밀 유출" 반발
통신비 인하 유도 효과 기대
이통사·시민단체 공방 전망



안진걸 시민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지난 4월 12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이날 열린 이동통신요금 원가 공개소송 선고 결과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동통신사의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원가 관련 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 공개 될 것으로 보이면서 수면 아래 가라앉았던 기본료 폐지에 다시 눈이 쏠리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통신비 원가자료 분석을 통해 기본료 폐지 카드를 다시 꺼내 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난색을 표하는 모양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빠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까지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LTE 원가자료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가자료 공개는 지난 4월 대법원이 7년여 만에 휴대전화 요금의 원가산정

정보와 요금인하 논의 내용 등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뤄졌다.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청구를 한 2005~2011년 이통3사의 영업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등이다.

다만, 다수의 공개정보 요청에 따라

2011년 이후의 LTE 원가공개 쪽으로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 등은 그간 국민 다수가 LTE 요금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LTE 원가 자료도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공개대상은 2012~2016년 이동통신 3사가 제출한 영업보고서 가운데 영업통계, 영업통

계명세서 등으로 알려졌다.

이 중 핵심은 '원가보상률'이 기재된 영업통계다. 원가보상률은 일정기간 발생한 영업수익을 총괄원가로 나눈 값으로, 100%인 경우는 영업비용등이 영업수익으로 모두 회수가 됐다는 걸 뜻한다. 즉, 100%가 넘으면 통신사들이 받는 통신요금이 원가보다 높다는 의미다.

통신비 원가 공개가 LTE까지 확대되면서 기본료 폐지 압박이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감소 추세인 2G·3G와 달리 LTE의 경우 현재 이동통신 가입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과기정통부의 '무선통신서비스 통계현황'에 따르면 4월 기준 국내 LTE 가입자 수는 5202만명을 기록했다.

애초 문제인 정부는 공약으로 1만 1000원 통신 기본료 폐지를 내세웠지만, 업계 반발로 음성 200분에 데이터 1GB를 제공하는 월 2만원대 '보편요금제'로 방향을 선회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LTE 원가 공개로 인해 기본료 폐지

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에서는 원가보상률로 수익성이 나 국내 통신 요금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가보상률은 공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 요금 관리에 활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간기업에 이를 적용하는 것은 올바른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원가보상률을 근거로 요금을 낮춰야 한다면, 초기 투자비용이 막대한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 초기에는 요금이 대폭 올라야 한다는 논리와 같아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비밀 누설을 우려해 LTE 원가자료 공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시민단체가 2011년 이후의 자료 공개를 청구할 경우 공개의무가 있는지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측에 사업자의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기 기자 silkni@metrosecu.co.kr

주요 음식값 10% 경추 서울 냉면 9천원 근접

서민이 즐겨 찾는 냉면과 김치찌개 등 주요 외식 메뉴의 가격 상승세가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1년 새 냉면 가격은 10% 올라 한 그릇에 9000원에 근접하는 등 주요 음식 물가가 일제히 상승했다.

6일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을 보면 서울 지역에서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대표 외식 메뉴 8개 가운데 7개 가격이 1년 새 올랐고 1개만 지난해와 같았다. 가격이 내린 메뉴는 하나도 없었다.

지난달 서울 지역 음식값을 보면 냉면 가격은 한 그릇 평균 8769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7962원)보다 10.1%(807원) 올라 가격 인상률이 가장 컸다.

외식 메뉴 1년 새 일제히 상승 간편식품 전년 비 3.8% 올라

삼겹살 가격은 200g당 1만6489원으로 지난해보다 5.6%(868원) 올라 상승 폭이 두 번째로 컸다. 이어 김치찌개 백반(2.6%), 칼국수·김밥(1.8%), 비빔밥(1.4%), 삼계탕(0.8%) 순으로 많이 올랐다.

8개 조사 품목 가운데 자장면만 유일하게 4923원으로 지난해와 가격이 같았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식당 음식값을 비교해 보면 삼겹살(200g 기준)이 가장 비싼 서울(1만6489원)과 가장 싼 강원도(1만1444원)의 가격 차가 5045원이나 됐다.

냉면도 가장 비싼 서울(8769원)과 가장 싼 제주도(7000원)의 가격 차가 1769원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 가장 비싼 지역은 비빔밥은 대전(8900원), 김치찌개 백반은 제주(7125원), 자장면은 광주(5300원), 삼계탕은 광주(1만4400원), 칼국수는 제주(7250원), 김밥은 대전(2300원)이었다.

소비자원은 앞서 지난달 10일 주요 간편 식품 10개 품목의 판매가격을 1년 전인 지난해 5월 12일과 비교한 결과 즉석 카레(3.8%), 라면(2.1%), 탕(1.4%), 컵라면(0.2%) 등 4개 품목 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

'주 52시간 근로'... 뷰티업계 근무시간 조정 등 '각양각색'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화장품과 의류, 가구 등 업체들이 사업장 특성에 맞는 대응 방안을 도입하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우선 도입된다. 50~299명 기업에는 2020년 1월부터, 5~49명 기업에는 2021년 7월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형 화장품과 의류, 가구 등 업체들은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일찌감치 대책 마련에 나섰다.

퇴근 시간 PC 자동 오프제, 출퇴근 시간 선택제, 시차출퇴근제, 집중 근로 등 사업장별, 직종별 특성을 염두에 둔 다양한 방안을 시행 중이다.

화장품 공장이나 로드숍 등 매장을 둔 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신규 채용도 검토하고 있다. 여행·관광업계가 근무 형태에 변화를 주고 업무 효율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관련 준비에 한창이다. 반면,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 중에서는 높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장기적으로 자동화 설비 도입을 고려하는 곳도 적지 않다.

◆**근무 시간 조정·인력 충원**
LG생활건강과 애경산업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따라 공장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애경산업의 경우, 청양과 대전에 있는 생산 공장 직원들의 근로시간 조정 방안을 모색 중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영업·디자인 등 특별 업무직에게도 주 52시간 근로제가 영향을

내달 1일 300인 이상 기업 우선 적용

화장품·패션·가구

유연 근무제·2교대·신규 채용 등

사업·직종 특성 감안한 대책 마련

중소기업·여행·관광

인건비 부담·생산 차질 등 '울상'

여행 "소득 줄어 여행 소비 줄 것"

미칠 것으로 보고, 이달 한달 동안 실제 점검을 거쳐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LF, 한샘, 한샘 등 패션·가구업계가 일찌감치 도입에 나선 유연 근무(플렉시블 타임)제가 화장품 업계에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코스맥스는 지난 1일 출퇴근 수요 조사를 통해 사무직과 연구직에 탄력근무시간제,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했다. 또 화성 4개 공장의 인건비 상승을 우려해 생산성 향상 방안과 인력 채용을 동시에 검토한다.

미샤와 네이처리퍼블릭 등 매장을 운영하는 화장품 업체들도 대책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화장품 영업장은 소비자 상담 결과가 매출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시간을 줄이기 쉽지 않다. 따라서 매장 직원들의 근로시간 단축, 2교대 근무, 집중 근무제 등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소기업·여행 관광업계는 '울상'**
이미 주 40시간 근무를 시행하는 곳이



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둔 기업들은 유연근무, 퇴근시간 PC 자동 오프제,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늦은 시간에도 불이 꺼지지 않는 빌딩. /연합뉴스

많은 대기업의 경우 탄력근로제 도입, 신규 채용 등을 계획하며 차근차근 주 52시간 근로제를 대비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영세 업체들은 우려가 크다.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기술·기능직 분야의 인력이 부족해지고, 가동률 저하로 생산 차질을 빚어 납기 준수가 곤란할 것이라 우려도 뒤따른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신규인력 충원과 공정 자동화 등 생산설비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도입하면 중소기업 입장에서 인력 채용은 쉽지 않고 경쟁 심화와 효율성 악화로 오히려 인력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행·관광업계도 기대 보다는 우려가

크다. 업계 관계자들은 근무 시간이 줄어들어 활동이 증가하리라는 예측도 있지만, 수입이 줄어드는 만큼 악영향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여행업계의 경우 직원 300명이 넘는 여행사는 하나투어, 모두투어 등 몇 군데 되지 않아 당장 7월부터 영향을 받는 곳은 많지 않다. 다만 소규모 여행사나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여행사 등은 적은 인원이 장시간 근무해야 하기 때문에 추후 근로시간 단축이 확대 적용되면 영향을 받을 것이라 분석했다.

여행업계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는 양쪽 측면 모두에서 여행업에 악재"라며 "지금도 사람들이 근무시간이 길어서 여행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을 규제해 소득이 준다면 여행에 대한 소비는 더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식약처 '아이코스·글로·릴' 필연형 전자담배 유해성 평가 오늘 공개

아이코스, 글로, 릴 등 필연형 전자담배에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결과가 공개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성분의 국제표준 측정방법인 ISO(국제표준화기구) 방식과 헬스 캐나다(캐나다 보건부) 방식을 바탕으로 인체에 해로운 니코틴 및 타르 등 유해물질들이 필연형 전자담배 흡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검사해

T&G의 '릴' 등 3종류에 대해 검사에 들어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담배 성분의 국제표준 측정방법인 ISO(국제표준화기구) 방식과 헬스 캐나다(캐나다 보건부) 방식을 바탕으로 인체에 해로운 니코틴 및 타르 등 유해물질들이 필연형 전자담배 흡연 과정에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검사해

왔다. 앞선 국내의 연구에서는 필연형 전자담배에서도 타르, 니코틴을 포함해 일산화탄소, 포름알데히드, 아크롤레인, 벤조피렌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

필연형 전자담배는 담뱃잎에 직접 불을 붙여 태우는 일반 필연 담배와 다르다. 전용 담배를 충전식 전자장치에 꽂아 고열로 쪄는 방식이다.

이에 담배업계는 쪄는 방식으로 발생하는 증기에는 유해물질이 적게 들어 일반 담배와 비교하면 건강에 덜 해롭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필연형 전자담배에도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점을 고려해 암 유발을 상징하는 경고그림을 오는 12월부터 부착하기로 했다. 이에 한국담배협회는 "유해성 논란이 진행 중이므로 필연형 전자담배 경고그림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박인용 기자